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	
	배포일시	2020. 10. 14.(수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 물류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배성, 사무관 광병철, 주무관 김영두 • ☎ (044) 201-3998, 4003	
보 도 일 시	2020년 10월 15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14.(수) 13:20 이후 보도 가능		

## 이륜차 배송·대리운전 업계-노동계, 표준계약서 도입에 맞손 - 불공정거래 금지·종사자 안전관리 강화 등 상생발전에 뜻 모아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이륜차 배송(퀵서비스·배달)·대리운전 업계, 노동계 및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(위원장 진성준)와 10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‘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’을 체결했다.

○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,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책임의원,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, 고용노동부·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와 더불어 업계 및 노동계 대표 등이 참석\*했다.

\* (퀵서비스) 인성데이터,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 
 (배달업계) 우아한형제들,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, 바로고, 로지올, 메쉬코리아, 쿠팡  
 (대리운전) 카카오모빌리티, 코리아드라이브  
 (노동계)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,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,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,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 등

□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한 ‘퀵서비스 배송 위·수탁 표준계약서’, ‘배달대행 위·수탁 표준계약서’ 및 ‘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’는 국토교통부가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,

○ ▲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, ▲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, ▲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.

- 이륜차 배송, 대리운전 종사자들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노무제공자인 경우가 많고, 계약서 작성 없이 다수 사업체와 구두계약 등을 통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.
  - 그래서 종사자들이 계약사항 외 업무 강요, 종사자 과실에 의하지 않은 책임 전가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.
  
-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주요 업계 및 노동계 대표들은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이러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노력하여,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.
  - 국토교통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준 계약서가 관련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,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표준계약서의 도입 및 활용과정에서 필요한 입법적 조치가 있는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.
  
-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은 “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 경제와 함께 등장한 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고용형태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”라면서,
  - “정부는 산재보험·고용보험과 같은 노동자 보호 제도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면서, 표준계약서와 같은 연성규범도 도입하여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나갈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
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곽병철 사무관(☎ 044-201-399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